

#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③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성 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중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형기 (043-870-5420)
	제품시장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 (043-870-5427)

**1**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 통계기반의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 안전관리대상 전체 세부품목을 위해 우려 정도에 따라 3개 유형 (중점, 관심, 일반)으로 구분하여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 (중점관리품목\*)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인 품목, 사고조사 품목, 화재 증가 품목 등을 선정하여 집중\*\* 안전성 조사 추진

\* 리콜비율이 평균 이상, '23년 사고조사 5건 이상,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품목 등(59개)

\*\* 중점관리대상은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 제품을 구매·조사

- (관심품목\*) 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으로 시중 유통 확인 시 조사 하여 조사 사각지대 해소

\* B2B제품, 부분품·부속품, 전문가용 제품 등을 관심품목으로 지정

- (일반관리품목) 최근 3년간 1건 이상 조사한 품목으로 전년도 리콜여부, 사고조사 이력,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사품목 선정\*

\* '23년 리콜 또는 사고조사 이력이 있는 품목은 우선 안전성 조사 추진

□ 안전관리 취약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 (안전취약제품 안전성 조사) 노약자용 제품, 리콜사업자의 다른 생산제품, 증정품·사은품 등 안전관리 취약제품을 발굴·조사

○ (온라인 판매 제품 안전성 조사) 온라인 시장 급성장('18년 113조원 → '22년 210조원)에 따라 온라인 판매·유통제품에 대한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여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 □ 유통시기·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한 안전성 조사 추진

- \* 총 7회(정기 4회, 수시 3회)에 걸쳐 4,600여개 제품 조사
- (정기조사\*) 계절별 유통시기·시장수요 등을 감안한 제품 선정으로 적기 조사 추진
  - \* 연 4회(봄·신학기, 여름, 중점관리, 겨울) 정기조사 체계를 유지하되, 중점, 일반, 관심품목 조사 대상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품목 및 수량 조정
- (수시조사\*) 정기조사 사이에 수시조사를 추진하여 특정시기에만 유통되거나 사회적 이슈 제품, 사각지대 품목 등 조사
  - \* 3차례에 걸쳐 조사하되, 가정의 달 유통 증가 제품, 구매대행 제품, 관심품목 제품 등 정기조사에 반영이 어렵거나 사회적 이슈 품목 등 조사

## □ 안전기준 준수품목의 업계 자율적 안전기반 마련

- (협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안전기준준수 품목 관련 협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
- (안전실태조사) 안전기준준수 24개 전체 품목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추진으로 위해제품 유통 차단
  - \* 조사결과, 부적합제품은 향후 2년간 현장계도 후 미개선 제품은 안전성 조사 추진

## 2 불법제품 단속 강화

## □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지켜야 할 「기술적 조치\*」를 구체화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불법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온라인 쇼핑몰사가 지켜야할 기술적 조치)  
①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KC 미표시 제품 삭제 ②상품 등록시 통신판매업체의 KC정보 입력 ③판매제품의 KC인증여부 등 관련정보 소비자 제공

- (온라인쇼핑몰 업체와 협업) 불법제품 정보 수시 공유 및 업계의 자율적 불법제품 유통관리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업체 전담 콜센터 운영, 맞춤형 교육 등 지원

#### □ 불법제품 기획 단속 등 온라인 단속 강화

- (온라인 불법제품 기획 단속)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고 급증 또는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선제적 기획 단속으로 불법제품 유통 차단
  - \* 불법신고가 급증하는 온라인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완구 등 기획조사 추진
- (온라인 조사체계 정비) 온라인상 불법의심제품에 대한 조사체계 등 관리원의 불법제품 업무처리지침 정비로 불법제품 단속 강화

#### □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역량 제고

- (지자체 협업) 지자체와 불법제품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병행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 ('22) 14개 기초단체 → ('23) 19개 기초단체 → ('24 계획) 20개 이상 기초단체
- (경찰청 협업) 불법제품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 등 협력 추진
- (소비자단체 협업)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KC마크 미부착 등 불법제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계도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제품 적기 모니터링으로 불법제품 신속 차단 및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 대한 특별단속(봄·가을) 등 추진
  - \* 소비자공익네트워크(전기), 소비자시민모임(생활), 생활안전연합(어린이 놀이학습), 소비자연맹(어린이 운동·이동), 녹색소비자연대(어린이 착용), 소비자교육중앙회(어린이 섬유)

### 3

## 리콜제품 유통 차단의 효과성 제고

### □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 유통형태에 맞게 리콜사업자의 리콜공표 방법 개선 등 리콜이행 가이드라인 보완

< 유통형태에 따른 사업자 리콜공표 방법(예시) >

분류	오프라인 유통 제품	온라인 유통 제품
리콜 공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내 POP 설치</li> <li>· 포스터 부착</li> <li>· 신문사 광고</li> <li>· 리플렛 등 홍보물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페이지, SNS 게시</li> <li>· 대형 유통사 배너 게재</li> <li>· 소비자에게 직접 문자 연락</li> <li>· 구글 폼, 네이버 설문지 링크 전송</li> </ul>

- 온라인플랫폼사가 보유한 구매자 정보\*를 리콜에 활용

\* 온라인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설문서 배포(리콜대상 제품 구매사실 통보, 리콜의향·개인정보 이용 동의여부 확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자에게 리콜사업자가 연락·리콜이행

- 리콜제품의 시장 재유통 방지를 위해 리콜제품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 확산

- (중소형 매장 확산) 중소마트의 주문·배송·재고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업체 등을 통한 지역 중소마트의 시스템 도입 확산
- (협단체 설명회 개최) 시스템 미구축 유통사가 많은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전략적 홍보 추진
- (시스템 인지도 향상)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인지도 개선을 위해 로고 개선
- (지자체 리콜제품 등록) 지자체 리콜현황 파악 및 등록 개선방안 마련 후 지자체 리콜제품 등록 추진

□ 세부품목 현황

구분	중점관리		
전기 용품	케이블(공칭단면적 95mm <sup>2</sup> 이하),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레인지후드, 수도 동결 방지기, LED램프(모듈), (직)온열시트,	플러그 및 콘센트, 스팀해빙기, (교)전기방석, 냉방기, 직류전원장치, 전기온장고, (직)전기찜질기, , 지폐계수기,	케이블릴, 전기요, (교)전기찜질기, 송풍기, LED 등기구, 전지, (직)전기방석 전기매트
	<b>24개</b>		
생활 용품	가스라이터, 고령자용 보조차, 산악용자전거, 승차용 눈보호구, 등산용로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구(높이 762mm이상의 가정용서랍장/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압력솔, 스케이트보드, 휴대용 레이저용품, 온열팩, 연질염화비닐호스, 킥보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휴대용 예초기의 날, 쌍커풀용 테이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b>19개</b>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아동용 이단침대, 보행기,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아용 삼륜차, 유모차, 어린이용 킥보드, 기타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b>16개</b>		
<b>계</b>	<b>59개</b>		

※ 전기·생활용품은 세부품목 기준 / 어린이제품은 품목 기준 선정